죽음부른 선거인단 모집 경쟁

불탈법 횡행 동원경선 '우려가 현실로'

정치적 과욕에 국민 경선 신뢰성 타격

총선 판도 영향속 민주 진상조사 나서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결국 인명까지 앗아가는 참극을 빚었다. 이번 사건은 '동원'이 불가피한 국민경선 제도와 경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과욕이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원인과 배경**=이번 사건의 원인은 민주통합당의 '국민 경선 선거인단' 제도 자체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 경선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천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선 룰이 정해지기 이전, 민주통합당 내외에서는 국민 경선이 결국 동원 경선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국민 참여를 넓혀 '공천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 경선제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민주통합당 국민 경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구 곳곳에서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대리 등록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적 냉소주의 확산으로 선거인단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광주·전남 지역구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 구도가 유지되면서 각종 불·탈법 선거인단 모집이 횡행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파장 어디까지**=이번 사건은 동구의 경선 판도는 물론 민주통합당의 국민 경선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켜 전체적인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사건에 특정 예비 후보가 연관됐을 경우, 후보자 사퇴 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동구의 경선 판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관권 개입 여부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민주통합당이 개혁공천의 척도로 내세웠던 국민 선거인단 경선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선거인단 대리 등록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선거인단 경선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경선 결과를 놓고 각종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총선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 경선 일정에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동원 경선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선 후보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도입될 수 있는 여론조사를 경선에 부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 경선이 동원 선거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보 공천 결과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민주통합당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진상조사 착수**=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선관위 및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으로 선거인단 경선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후보 공천은 물론 전체적인 총선 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관련한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인단 경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었다"며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선거인단 대리 등록 문제가 논의됐다"며 "우선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동구선관위 직원들이 26일 광주시 동구 계림1동주민센터 4층 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십명에 1만원씩 송금된 통장 발견

선관위 단속 현장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건물에서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 소속 단속반원 10여명은 광주시 동구 계림1동 주민센터 4층 꿈나무 도서관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계림1동장을 지낸 조모(65)씨와 민주당원 등 5명이 있었다.

선관위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조씨 등은 허둥지둥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고 선관위 직원들은 몸으로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이 후 선관위 직원들과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을 받은 사람들과의 실랑이가 한동안 이어졌다.

사무실에는 주민 이름과 나이, 주소, 연락처, 서명 등이 적힌 세대인 명부를 비롯, 수십명에게 1만원씩 송금된 흔적이 남아있는 통장 등이 쌓여 있었다.

민주당 소속 한 당원은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뿐인데, 무엇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선거법 위반이 아닐땐 당신들(선관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기자들이 있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마라"고 맞대응했다.

사무실 주변에는 상대 후보측으로 보이는 운동원이 선관위와 사무실 내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감시하고 있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조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며 4층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6층 옥상으로 이동해 투신했다.

선관위 직원이 뒤따라 나섰지만 조씨를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허술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도 조씨의 투신 이후에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조씨가 투신한 지 30분가량 지난 뒤 부랴부랴 4층 출입문을 통제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은 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 광주 북갑 일부 예비후보들

'정체불명 여론조사' 수사 의뢰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경진·이형석·임현모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국민경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지역 선거구에서 실시됐다"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 선관위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5일 만에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하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기간에 모 예비후보측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경선 신청과 참여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중앙당이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을 모집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선거인단은 모바일투표로 착각하는 등 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정작 투표 당일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경선 기간 중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경선 세부규칙을 제정해 공정한 국민경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광주 북구 갑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에 비해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모바일 여론조사를 모바일 선거로 쉽게 혼동할 만한 세대들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흠집내기식 불법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그걸 말이라고…